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 일시 2019. 4. 12.(금) 오후 2시

| 장소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개회식

14:00-14:10

사회 _ 홍종욱(서울대)

제1부

주제발표

14:10-15:50

사회 _ 김정인(충천교대)

‘역사전쟁’을 성찰하며 _ 홍석률(성신여대)

근대 기원·계보의 정치와 정통론 _ 임종명(전남대)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_ 이용기(교원대)

건국절 논쟁의 역사적 함의 _ 이기훈(연세대)

제2부

종합토론

16:00-18:00

사회 _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김효성(연세대), 윤상원(전북대), 임경석(성균관대)

이정선(조선대), 정병욱(고려대), 정일영(서강대)

| 주최 **歴史問題研究所** 역사학연구소 한국학사학회

Institute of Historical Studies

Korean History Society

학술대회 일정

개회식 (2:00~2:10)	사회 : 홍종욱(서울대학교)
1부 주제발표 (2:10~3:50)	사회 :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역사전쟁’을 성찰하며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근대 정통론과 기원·계보의 정치 임종명(전남대학교)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이용기(교원대학교)
	건국절 논쟁의 역사적 함의 이기훈(연세대학교)
2부 종합토론 (4:00~6:00)	사회 :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김효성(연세대학교), 윤상원(전북대학교) 임경석(성균관대학교), 이정선(조선대학교) 정병욱(고려대학교), 정일영(서강대학교)

목 차

<개회식>

학술대회 취지문	1
----------------	---

<발표문>

‘역사전쟁’을 성찰하며(홍석률)	5
근대 정통론과 기원·계보의 정치(임종명)	19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이용기)	27
건국절 논쟁의 역사적 함의(이기훈)	43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학술대회 취지문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일제 시기 최대의 반식민 대중봉기로, 그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사회적 동향 때문이다. 5·18 광주항쟁과 반민특위에 대한 일부 정치세력의 저열한 주장을 보면, 과연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또한 근거 없이 과장되고 허황된 고대사 관련 역사담론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역사학의 존재 의미마저 의심케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건국’을 둘러싼 정치적, 학문적 논쟁이 그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제정 시도로 촉발된 이 논쟁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불러왔다. 양쪽의 주장은 엄밀한 학문적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일종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가깝다. 역사에 대한 과잉정치화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이지 않을 수 없다.

본 학술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 정통론과 ‘역사전쟁’의 문제의식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건국이란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양자의 대립은 국가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국가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주체로 설정됨으로써 여타의 모든 역사적 행위자들은 다만 국가의 종속 변수로만 재현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3·1운동 당시 ‘독립만세’라는 구호에 응축되어 있는 수많은 민중들의 원망과 바람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중심주의는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킨다. 국가의 기원을 만들고 그 기원의 신성화를 통해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설이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1919년 설은 이른바 ‘임정법통론’을 강조한다. 전자가 한국형 극우정치의 본령이라면 후자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일 것이다. 서로 다른 기원을 근거로 양자가 벌이는 정통성 경쟁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역사전쟁인 셈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어쩌면 국가주의의 승리의 역사이기도 했다. 식민화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놀라운 성공을 이끈 주체가 국가로 환원되는 서사 구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성공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가 곧 건국 논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국가를 역사의 성공적인 대주체로 상정하고 그 성공에 걸맞은 '밝고 명량한'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역사만들기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던 과거 정권에 국한되는 문제인지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건국 백년'이 운위되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는 학계를 포함해 공론장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 전시관 개편이 학계와의 소통을 포함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정뿐만 아니라 전시 내용 역시 '건국 백년'이라는 구도에 맞춰져 있다면 더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의 민족화를 위한 민족주의적 열정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적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 욕망은 해방 이후 한국의 군대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자 한다. 모든 소가 까맣게 보이는 암흑의 인식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것이라 해도 우리는 일단 역사적 사실에 검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형성 과정은 전쟁과 학살을 동반한 거대한 폭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통해 사자와 토끼의 잔인한 자유경쟁을 삶의 기본으로 만든 주역도 국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와 겹쳐졌다.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화의 과실마저 빈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언명처럼 국가의 정당성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현재적 모순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 내지 무관심하면서 과거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이름으로 역사를 욕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사가 현실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한 해방의 계기가 아니라 그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학)의 종말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919년 3월의 함성에 다시 귀 기울여야 된다. 그 함성은 독립만세라는 하나의 목소리였지만, 또한 저마다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아우성이기도 했다. 거리에 나선 백정과 기생, 농민과 노동자, 학생과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이야말로 3·1운동의 마땅한 계승자들이지 않겠는가.

3·1운동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큰 함성이 터져나온 사건이었다면, 오늘날 그 계승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야 하겠는가. 국가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해결할 답 역시 가장 낮은 이들이 외치는 아우성 속에 있을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는가?

현실의 불평등과 억압을 호도하기 위해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기획에 역사가 동원된다면, 역사가 그 화려한 성공담으로 채워진다면 3월의 아우성은 돌아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요컨대 오늘의 이 학술회의는 역사가 국가의 자기 정당화 논리로 전락할 수 없음을 보여주하고자 준비되었다.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역사전쟁’을 성찰하며

홍석률 (성신여대)

Part.1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1.1 PART1 역사전쟁의 경과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역사전쟁의 경과

- 민주화 이행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 과거사 정리 작업
- 2004년 10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비판. 11월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창립

(노무현 정부는) 지배 세력 교체와 기존 질서 해체를 위한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고 있다

- 자유주의 연대 창립선언문 中-

1.1 PART1 역사전쟁의 경과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역사전쟁의 경과

- 2005년 1월 ‘교과서 포럼’ 결성
- 2008년 3월 교과서 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간.
‘건국절 논란’, 교육부 검인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
-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 국정화론 대두.
- 2015년 11월 3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확정 고시.

1.2 PART1 ‘역사전쟁’과 역사교육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역사전쟁’과 역사교육

- 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역사전쟁이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발생.
- 영국 ‘보수당’ 집권기(대처, 캐머런) 국가교육과정 제정(1991) 및 개정 논쟁.
미국 ‘역사표준’(1992-96) 논란
- 국가권력 및 정치집단이 개입.
보수 정치·사회집단이 민족과 국가의 자긍심, 영웅들을 강조.
- “보수 정치사회집단 vs.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의 대치 구조.
- 보수 집단은 역사학계 및 교육계를 비판하며 역사의 해석보다는
사실 학습을 강조하고, 자국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며
주류 문명(서구 문명)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조.

1.3 PART1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의 특성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의 특성

-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논쟁.
- 역사교육의 방향과 내용보다는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대치하면서 애국자/반역자 논쟁
- 정부가 교과서 발행에 과격하게 개입.
이명박 정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 및 2-3년 만에 역사교육 과정 개편.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 과잉정치화 및 과잉이념화의 극단.

1.4 PART1 교과서를 보는 관점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교과서를 보는 관점

관점 1

다른 교재와 학연하게
구별되는 기본 학습교재

VS

다양한 교재들 중 하나

관점 2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VS

저자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간 텍스트

-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또한 최근에 올수록 교과서의 특권적 위치를 상대화하고, 저자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간 것으로 보며, 국가가 덜 개입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제도로 가는 추세.
-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화할수록 교과서는 상대화. 그러나 치열한 역사교과서 논쟁과정에서 역사교과서는 더 절대화되는 경향

1.5 PART1
교과서에 투여된 정사관념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 역사교과서에 투여된 정사(正史) 관념

- 한국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술
나아가 일종의 정사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
- 정사(正史)는 전근대시기 동아시아 왕조가 공인한 역사서를 의미.
중국에서는 황제가 특정 사서를 정사로 공인하는 전통이 이어져 옴.
- 같은 국가의 국민들은 단일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역사’를 서술하여 확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
-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거침없이 표출.
예)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

1.5 PART1
교과서에 투여된 정사관념

왜 역사교과서였을까?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사관이 그러했듯이
‘국사의 정사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사를 만들어 초·중등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정사로서 국사는 여러 개일 수 없다.

홍부호, 「교과서 발행 구분 근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4.8.28.)자료집, 89-93쪽 (집계본 2018, 128쪽에서 재인용)

- 역사학계는 국정화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국정교과서가 부정확하고, 친일적,
반통일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 치중.
국가가 주도해 “올바른 역사”를 서술한다는 발상 자체의 위험성과 퇴행성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였다.
- 정사 관념, 근대사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단일한’, ‘올바른’ 역사서술이 가능
하다는 관념이 역사논쟁의 과잉정치화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원인.
이러한 正史 관념은 정통론적 역사인식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

Part.2

과잉정치화 된 역사논쟁에서 협소해진 역사

2.0 PART2 과잉정치화 된 역사논쟁에서 협소해진 역사

- 역사논쟁이 과잉정치화 되면서
역사논쟁을 통해 역사인식이 다차원적으로,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가 더 협소해지고, 단순해지는 경향.
- 보수정부와 범보수세력은 심지어 한국사학계 일반을 좌경용공화된 집단, 반국가
집단으로 매도. 특정집단이 그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일한 집단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타자화되는 것은 집단 사이의 권력관계를
반영. 어떤 고정관념은 힘이 강한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형성
-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는 국가권력을 앞세운 보수세력의 공세에
방어적, 수동적으로 대응. 민족주의, 실증주의의 방패 뒤로 가는 경향.

2.1 PART2 ‘증북론’에 대항하는 ‘친일론’

협소해지는 역사

■ ‘증북론’에 대항하는 ‘친일론’

- 한국사학계의 일제 식민지 시대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탈근대주의적 역사인식 등이 대두하며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화되는 추세
- 반일/친일, 수탈/개발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식민지 근대’를 좀 더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
- 민족, 국가, 계급만을 주체로 하는 역사서술이 아니라 빈민 등 하위주체(subaltern),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 집단에도 관심

2.2 PART2 찬양론에 맞서는 악마론

협소해지는 역사

■ 이승만·박정희 찬양론에 맞서는 악마론

- 보수 집단은 이승만, 박정희 등 최고 지도자의 위대함과 역할을 강조. 건국과 부국을 이끈 인물로 역사 서사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부각. 역사 논쟁을 최고지도자 평가논쟁으로 협소화
- 반대 진영의 대응은 이승만, 박정희의 과오와 허물을 부각시키는 악마화의 경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 평가논쟁에 매몰되거나 여기에 집중하여 역시 역사인식을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자초

2.3 PART2 건국론에 맞서는 임정법통론

협소해지는 역사

▪ 건국론에 맞서는 임정법통론

- 1970년대 말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일부 한국의 진보적 역사학자 그룹의 일제시대사 연구는 임정법통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
그러나 1948년 건국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임정법통론이 되살아나는 경향.
- 친일/반일의 구도 속에서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더욱 주변화되는 경향.

Part.3

과도한 이념논쟁으로 배반당한 이념

3.1 PART3 자유주의의 배반

배반당한 이념

■ 자유주의의 배반

- 뉴라이트 그룹은 ‘자유주의’를 표방, 올드라이트와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시도. 그러나 실제 역사 논쟁과정에서 자신이 내세운 이념을 정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 이념에 반대하는 배제적인 정신 상태를 강요(반공, 반북).
- 뉴라이트 그룹은 자유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거나, 여기에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이념을 배반하는 결과. ‘냉전 자유주의’의 한계.

3.1 PART3 자유주의의 배반

배반당한 이념

냉전시기에는 이 하나의 태도(반공산주의; 필자)가 너무도 강하게 자유주의의 전체적 성격을 형성하여서, 자유주의의 더 근본적 원리들이 희생되거나 잊혀졌다. 언론의 자유, 관용과 다양성은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원리들이 되었다. 나아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자주 쓰이던 모호한 표현을 빌자면, ‘공산주의에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비자유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도 반공산주의라면 눈감았다

아블라스터 2007, 580.

- 아블라스터는 냉전 자유주의에 대해 “공산주의에 강박관념을 가졌던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처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원리들을 그렇게도 비열하게 배반한 경우를 달리 찾기 어렵다”(596쪽)고 설명

3.2 PART3 이념에 대항하는 학문적 엄밀성

패반당한 이념

■ 이념에 대항하는 학문적 엄밀성

- 교학사, 국정교과서의 수준을 폭로하기 위하여 한국사학계는 학문적 엄밀성을 강조. 수백 개의 사실적 오류를 지적. 학문적 엄밀성, 실증이 강조되는 결과.
- 학술논문에서 확보되어야 할 과학성, 엄밀성과 교과서의 그것이 완전히 같은 차원일 수는 없을 것. 너무 학문적 차원의 기준만을 강조하면 교사의 자율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료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저해할 위험성.
- 나아가 '공공역사'의 영역과 대중적 차원의 역사 논의에 대해 학계가 너무 학문적 엄밀성만을 내세워, 자신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주장할 때, 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역사 공론장을 제약하고 협소화시킬 우려. 사람들이 역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고, 무서워진다. 특히 한국현대사 기피 현상.

Part.4

정사론, 정통론의 함정

4.1 PART4
정사론의 한계

정사론, 정통론의 합정

▪ 정사(正史)론의 한계

- 정사(正史) 관념은 다양한 역사인식의 경합과 소통을 차단하는 것.
- 단일하고,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정사의 추구는
한반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만연하고 있는 특권적, 혈통적 세습의식에
입각하여 국가의 ‘올바른’ 계승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정통론과 연결된다. 전근대적인 정통론적 역사관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잔존.
-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국가에서 ‘단일한’ 역사서술, ‘올바른’ 역사서술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 1978년 서독의 연방수상 Helmut Schmidt가 역사학 대회 개최사에서 한 말

개방사회에는 동일적이고 올바른 역사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들이었지만 독일이 ‘올바른’ 역사상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이 세기에만 두 번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와 세계는 아주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역사상이란 나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입니다.

베르거, *독일론* 2007, 217~218쪽

1999년 10월 독일 연방수상 Schröder 가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의 개막식에서

역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동쪽과 서쪽의 생활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이 공통의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독일인 모두가 통일적 역사상을 지니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 개방된 민주사회에 전혀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비평가 불교종 2007, 217~218쪽

4.2 PART4 단일한 역사서술에 집착하는 이유?

정사론, 정통론의 함정

■ 한국사회가 끝임 없이

단일한 역사인식, 정사, 정통론적 역사서술에 집착하는 이유?

- 분단상황 하의 정통성 경쟁.
역사인식이 각종 국가 정통성 경쟁에 손쉽게 휘말려 들어가는 조건.
그러하기에 하나의 역사, 올바른 역사에 집착하며, 상대방을 배제하려고 한다.
끝나지 않은 내전 상황을 그대로 반영.
- 장기적인 군사독재정권의 지속 하에서 이루어진 재벌 중심, 부동산 소유자 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구축된 한국 주류세력의 기득권이 독점적, 특권적, 세습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 보수, 개혁 집단 모두 집권 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역사인식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존재.

[참고문헌]

- 김기홍, 『미국의 역사전장에 비춰본 한국사교과서 논쟁』, 철학과 현실 90호, 2011
- 권근우, 『국가주의와 역사교육 그 너머를 향하여』, 역사와 교육 11호, 2018
- 권광익,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제99호, 2018
- 권광익, 『역사 교과서 논쟁과 유카이론의 역사인식』, 역사교육 123, 2018
- 권광익,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창세상, 2014
- 권민준, 『역사교육의 정치화 성격과 대항성 논의』, 역사교육논집 88집, 2014
- 권민준, 『20세기 말, 21세기 초 영웅보훈당의 역사교육정책과 역사전쟁』, 영웅연구 제22호, 2015
- 권영환, 『영국의 역사교육과 국가교육과정』, 역사교육논집 28집, 1999
- 권태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교육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41호, 2015
- 권태우, 『역사교과서 미입본장과 학문의 위기: 교육학과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서술 비교』, 역사와 현실 92호, 2014
- 권태우, 『역사교과서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국가 이미지 만들기』, 역사교육 131호, 2014
- 권태우,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연구방법』, 2014
- 대기화, 『충구에 있어서의 역사인식의 전개-교토제정의 경험과 함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집 7호, 1983
- 노근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순종하는 국민” 만들어인가?』, 역사와 현실 94호, 2014
- 방지현,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의 경제적 추이에 미주어 본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 사드의 부당성』, 교육과학연구 20집, 2014
- 손세호, 『미국 역사 표준서와 개정판 출판러싼 논쟁』, 미국학논집 34-3, 2004
- 신승하, 『한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안홍진, 『식민지시기 중등학교의 ‘국민성’ 양성 교육 연구』, 일본어, 수신과, 공민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7-3, 2015
- 윤해동, 『뉴라이프 운동과 역사인식-비역사적 역사-』, 민족문화논총 51, 2012
- 이광희, 『현명 정신과 역사교과서』, 철학과 현실 90호, 2011
- 이광희,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권, 창세상, 2006
- 최갑수, 『국가, 과거의 힘, 역사의 흐름-이론과 역사교과서 갈등』에 부쳐, 역사비평 85호, 2008
- 최환기, 『역사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활동의 문제』, 역사교육 84호, 2002
- 홍석용, 『‘대한 교과서’의 난감한 역사』, 역사비평 83호, 2008
- 홍석용, 『남한의 역사 서술과 상계받은 자부심의』, 역사비평 106호, 2012
- 황준홍, 『한국사연구에 있어 조보 野史의 위치』, 석달논총 제15집, 1989
- 이프리트 사미트, 『학문과 출판』, 오리엔탈리즘, 코브론고, 2000
- 앤서니 아볼라스타, 『프리게 불핀』, 서주 자부심의 흥성과 쇠퇴, 나남, 2007
- 권다심, 『스. 에리 홀서트, 『이탈리아의 정치』, 세계의 역사교육 논쟁』, 푸른역사, 2016
- 에드가 볼프, 『미국인, 김승환 옮김』, 무기가 된 역사-독일사프 읽은 역사전쟁』, 역사비평사, 2007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근대 정통론과 기원·계보의 정치

임 종 명(전남대 사학과)

1. 들어가면서: 역사 전쟁, 정통성과 정통론
2. 전통 시대 정통론: 중화왕조 중심의 단선적 기원·계보학
3. 근대 정통론: 역사의 극사화와 민족 생산
4. 식민 시기 경쟁하는 정통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언어·문화 공동체 주의
5. 식민지 이후 시기 정통론: 탈식민화와 두 개 한국들의 민족 정체성 경쟁과 한·조선민족 생산
6. 나오면서: 기원·계보학의 정치성과 탈역사화

1. 들어가면서: 역사 전쟁, 정통론과 정통성

- 왜 지금 정통론?
 - 역사 전쟁의 양상: 대한민국의 기원을 둘러싼 '임시정부법통론' vs '건국절'이라는 두 개의 '정통론적 기원·계보론'의 상호 경쟁
- 검토 대상
 - 전통 시대 정통론과, 특히, 현대 역사 인식의 기초를 이루는 근대 정통론
 - 전통 시대 정통론의 근대적 습합(濕合)으로서의 근대 정통론
 - 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지(兩枝分岐)
 - 근대 정통론의 균열·내파 등
- 기대
 - 역사 전쟁의 역사적·인식론적 맥락 이해
 - 정통론적 기원·계보학에 기초한 역사 전쟁의 비판적 이해

2. 전통 시대 정통론: 중화·왕조 중심의 단선적 기원·계보학 (2)

- 전통 시대 동아시아와 조선 왕조
 - 동아시아: 중국·중화 중심의 '조민족적' 의례·문화 관계망(nexus)
 - 동아시아-조선 왕조: 중국 중심의 관계망 참여를 통해 왕조의 정치적 권위 확보와 이를 통한 신분제적 왕조 지배 질서의 안정적 유지
 - 중국 왕조의 변화 -> 중국 왕조와 동아시아 왕조의 관계 재설정 문제 제기 -> 동아시아 전체와 동아시아 왕조와의 영향 => 중국 지식 생산과 습득
- 전통 시대의 '역사', '사서'
 - 중국·천자 중심의 공간·시간관 내장과 그 세계관 표현: '비(非)민족적 역사'
 - 왕력(王曆), 왕조-왕조의 시간적 기록: '비(非)민족적' 신분제 사회의 최고 신분인 왕(가·조), 왕권, 나아가 지배 질서의 안정화 목적으로 '왕조의 계승 관계와 계통'에 주안 -> 혈연성, 특히 피의 계승 관계 중심 -> 혈연적 계통 의식 강화

2. 전통 시대 정통론: 중화·왕조 중심의 단선적 정통론(2)

- 대중 지배와 통치 자료: 특히 기전체에서처럼 통치의 백과사전 성격 -> 관료제의 발달과 함께 왕조와 같은 특정 정치체에 대한 충성 이념·실천 발달
- 상고적 시간관: 상고적 시간관, 기원론적 의식과 사유를 발달
- 순환적 시간관: 시간과 세계의 원리주의적 인식
- 편년체 관습: 계보적 통사 구성의 자원
- 경사(經史) 일치 이념과 강목체 관습: 본질론적·환원론적 역사 쓰기
- 정통론에 기초한 통사적 역사 쓰기
- 중국 정통론
 - 기원: 漢代 정통론, 자신의 왕조를 자연 또는 천명(오형상극·상극)에 의한 정통 왕조로 합리화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것
 - 중국 송대(宋代), 삼국시대의 정통을 둘러싼 분분한 논의와 이후 정통론 확립
 - 북송 사마광의 <<자치통감>>, 위(魏) 정통화 vs. 남송의 주희의 <<자치통감강목>>, 측(蜀) 정통화

2. 전통 시대 정통론: 중화·왕조 중심의 단선적 정통론 (3)

- 소속 왕조의 현실 합리화 의식: 성리학적 대의명분 입각, 소속 왕조 의리 강조
- 중화 의식의 소산: 성리학적 대의명분 입각, 화와 이의 역사 구분, 지리적 요소(所出之處)와 혈연적 의미에서의 한족 왕국인 중국만이 정통
- 조선 정통론
 - 조선 전기, <<동국통감>>의 중화 중심의 유교적 정통론(통일 신라->고려 정통)
 - 청조 등장 이후 권위의 자체 생산 필요성에서 '소(小)중화' 자처와 정통론 강화
 - 조선 후기, <<동사강목>>의 소중화 의식에 기초한 정통론(단군->기자->마한->(삼국시대 무통)->통일신라->고려)
- 전통시대 동아시아 정통론
 - (소)중화 의식에 기초한 단선적 계보의 정통론 구성을 통한 배제의 정치적 계보화
 - 두 개 이상의 경쟁 왕조들의, 또는 권위 생산의 위기에 처한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 확보·승인을 위한 문화적인 권력 장치

3. 근대 정통론(1): 근대 초기, 역사의 국사화와 민족 생산(1)

- 근대 시기 동아시아와 조선 왕조
 - 근대: 구미 기원의 민족(-국가)의 시대와 일국적·세계적 민족-국가 체제
 - 민족국가 체제의 동아시아 확산과 의례·문화 중심의 중화문명권 해체
 - 비(非)민족적 왕국 조선, 자주적인 근대 민족-국가로의 변화 강제/필요
 - 국가 소유·운영 주체로서 근대 정치에의 주체적·평등적 참여의 전제 조건인 민족의 존재
- 왕국의 민족 국가화와 민족 생산
 - 서구 기원과 일본적 번역물인, '닛선' 실체로서의 민족의 포용과 지난한 민족 생산 작업
 - 제후적 왕국의 주권적 국가화: 대한제국 선포, 청제건원(淸帝建元), '독립 서고', 국기 등 국가 상징물 제작
 - 왕국의 민족화와 민족 생산: 한글 국어화와 역사 국사화에서 처럼 비민족적 언어·지식의 민족화

3. 근대 정통론(2): 근대 초기, 역사의 국사화와 민족 생산(2)

- 왕력의 국사화/민족역사화
 - 대한 제국 학부의 <<조선역사>> 등의 교과서, 신재호의 <<독사신론>> 등
 - 교과서 제목의 변화: <<朝鮮歷代史略>>(1895)에서처럼 '동국' '동사' 등의 전통 시대 호명의 '조선' '대한', '대동(大東)', 심지어 '대조선' 호명 대체 경향
 - 중국 관련 역사 서술, 특히 고조선 관련 서술에서 독립국 면모와 문화적 우월성 강조
- 정통론의 근대적 변용과 통사 체계 구성, 역사의 선적 계보화
 - 신재호: 부여족 중심의 고대사 체계화(단군-부여-고구려)와 혈연적 민족 구성
 - <<조선역사>>, <<동국역사>>: <<동국통감>>과 같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삼한-삼국-통일 신라-고려' 통사 체계 구성
 - 나머지 교과서: <<동사강목>>과 같이 '마한정통론' 의거,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국무통)-통일 신라-고려' 통사 체계의 목차
 - 마한 정통론: '조선' 국호의 '대한제국'으로의 변경(1897)과 연결

4. 식민 시기 정통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언어·문화 공동체 주의(1)

-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 정체성 (재)생산을 둘러싼 경쟁인 '정체성의 정치'
- 일본 식민주의
 - 근대 초기 일본 민족 구성과, 제국/식민주의 시기 '위계적인 다민족 (multi-ethnic) 제국/식민지 유지 목적의 chōsenjin(朝鮮人) 생산 작업
 -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개발-동원: <<朝鮮史>>(하야시 타이스케, 1892), 조선사편수회 등을 통해 동일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구성
 - 조선사람들(Koreans)의 민족화(ethnization): 개별 조선 사람들의 성별, 직업, 가문, 지역, 성격 등의 차이에 상관 없이 집단적으로 단일한 인류집단 (chosenjin, chosen minzoku)으로 만들
 - 역사책과 박물관 등을 통한 조선 역사 가시화(可視化) 과정에서 조선인의 mirror image
 - 정통론의 생산: '동조동군론'(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와 단군), '진구(神功)황후의 신라 정복', '일본의 본토'

3. 근대 정통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언어·문화 공동체 주의(2)

- 조선인의 역사 쓰기
 - 고유성 확립: 인종·문화적으로 고유한 집단으로의 한민족(Korean nation/ethnos)
 - 발전성 입증: 발전적 존재로서의 한민족
 - 주체성 입증: 역사의 주체적 존재로서의 한민족
-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 역사 쓰기
 - 정치적 주권체로서의 민족(nation) 구성 목적에서의 신채호, 박은식 등의 역사 쓰기
- 언어·문화 공동체주의(ethnocentrism) 역사 쓰기
 - 최남선 등의 '조선 고유 역사·문화 개발'에서처럼 인종주의·지정학주의·근대초국론·아류 제국(주의) 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의미성 부인
- 민족주의와 언어·문화 공동체주의 역사 쓰기의 비가시적 경계선: 주관적 문제 의식
- 비가시성의 원인: '민족(民族, the nation)' 내부의 두 의미들, 즉 기표상 가족·종족주의적 의미와 기의상 국가의 정치적 주체라는 정치적 의미, 이중적 의미들의 긴장과 경쟁-충돌
- 역사, 식민주의와 반(反)식민주주의의 경쟁/타협의 초점-> 민족 중심의 근대주의 역사학과 역사의 정치화와 탈(脫)역사화

4. 탈식민지 시기 정통론: 두 개의 한국들의 민족 정통성 경쟁과 한·조선민족 생산 (1)

- 식민지 이후 의제: 탈식민화의 주체 생산
- 주체 생산의 맥락: 종전/해방 직후의 시·공간
- 한국인, 제국/식민 시기의 다중적 주체: 한국인(ethnic/nation), 일본 (민족) 신민 (subject and/or nation) 등
- 민족주의의 고조: '제국의 시대' 종식과 민족-국가 체제의 전세계적 확산, 계몽주의적 미·소의 동아시아 귀환과 초기 냉전 진행
- 에스닉 민족주의의 불안정성: 미·소의 대(對)독·일 전쟁 승리와 에스닉 민족주의의 무의미화, 미·소의 초기 냉전 진행, '근대 초국'의 문제 의식 잔존, 인종·지역주의 상존, 두 개의 한국화('분단')
- 종전/해방 직후 부정형성
- 식민지 과거의, 나아가 과거 일반의 민족 역사화 3·1절과 개천절

4. 탈식민지 시기 정통론: 두 개의 한국들의 민족 정통성 경쟁과 한·조선민족 생산 (2)

- 대한민국의 가족 국가화와 정치적 계보학
- 대한민국의 확대 가족화: 국조(단군)-국부(이승만)-가족 구성원(국민)
- 참고) 일본 제국의 의제(擬制) 가족화: "一親同仁"과 "赤子"
- 효과: 대한민국의 대중적 구상화(具象化), 민주주의의 '순치', 규율적 국민 생산, 민족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표상, 대한민국판 한민족(the ROK-version of the Korean nation) 구성/생산, 역사학의 계보학화
- 두 개의 한국들의 정통성 경쟁과 정통론
- '두 개의 한국들의 민족 주체화 경쟁'
- 남한 국가의 "대한민국" vs 북한 국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한에서의 '대체로 신라 정통'의 역사 서술
- 북한에서의 '고구려 정통'의 역사 서술
- 대한민국판 한민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판 (the DPRK-version) 조선민족, 언어·중심 공동체 중심의 한/조선민족(the Korean ethno-centric nation)의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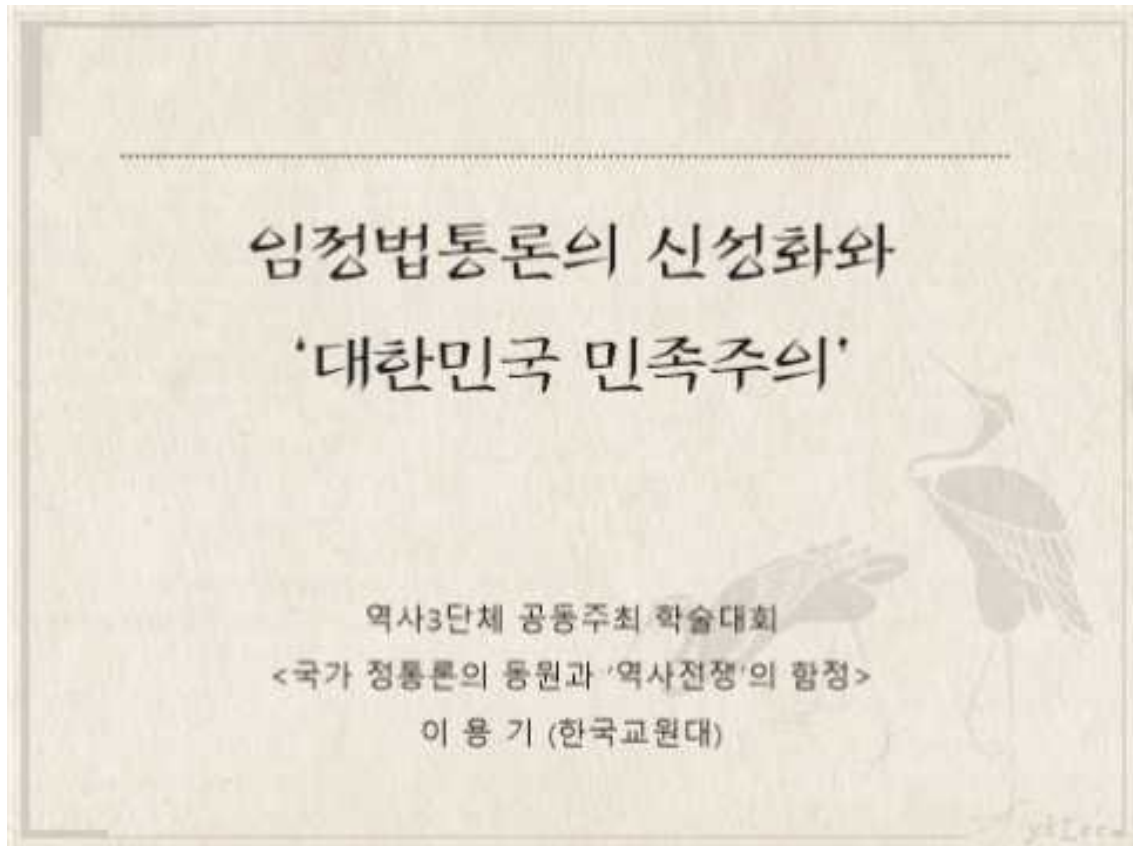
5. 나오면서: 기원·계보학의 정치성과 탈역사화 (1)

- 근대 역사학
 - 과거와 현재의 자기 동일성 상징과 현재 척도에 의한 과거 재단과 유폐
 - 단일한 혈연·문화·역사 공동체 상상에 기초한 민족적 경계선의 구축
 - 민족적 타자의 생산을 통한 단일화 전략과 비민족적인 것들의 배제
 - 정치 중심의 민족(-국가)상상과 하위 주체의 배제
 - 다양한 인간 공동체에 관한 상상 억압
- 정통론과 정치적 기원·계보학
 - 정통론(orthodox): 과거 기원의 구축과, 구축된 과거 기원과 현재 정치 권력의 계보화, 앞의 두 작업을 통한 경쟁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당대 정통성 구축
 - 기원학: 기원의 중시 속에서 현재의 과거화
 - 계보학: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단선적 계보의 구축 과정에서 그것과 충돌 경쟁하는 다면적·다층적 과거들의 역사 바깥 배제와 유폐

5. 나오면서: 기원·계보학의 정치성과 탈역사화 (2)

- 기원론 경쟁의 성격: 정치 지배 엘리트 세력들의 정통성/정당성(legitimacy) 구축을 통한 정치적 헤게모니 구축
 - 정치적 기원·계보학과 역사·역사학
 - 역사 정치화와 탈(脫)역사화
 - '역사(학)의 잠재력' 무효화: '일종의 외국'인 과거 역사와의 만남에서 만남의 상대인 과거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화하는 개방성 유지와, 나아가 현재의 상대화와 자기 성찰
- 참고) 역사(학) 기본 전제: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는 현재와는 다른, '일종의 외국'이다.
- 정통론적·정치적 기원론·계보학 중심의 국가 기획의 '오늘 날' 역력
 - 세계적인 탈(脫)민족·경계의 계기와 재(再)영토·민족화의 계기, 양자의 경쟁·충돌
 - 촛불 이후 남한, 다중(the multitude)과 하위 주체의 광장 진출과 강화된 재영토·민족화의 경쟁·충돌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1. 문제 제기

*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 2018년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건국백년' 선언 → 건국절 논쟁과 '역사전쟁'의 종지부! → 승리의 분위기가 완연(도진순)
- 정부·여당의 역사 드라이브 : 3·1혁명론, 임정수립기념일(4.11) 임시공휴일 검토, 육사의 부리는 신홍무관학교, '한반도 새 백년 위원회' 구성 등 → 한편에서는 '다시 시작된 역사전쟁' (문화일보)이라거나 '판재 민족주의' (윤평중)라는 비난
- 소모적이고 악무한적인 역사전쟁의 '합정'에서 벗어나, '역사전쟁' 자체를 복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거나 잃은 것을 성찰하여, 역사(학/교육)의 본령과 방향에 대한 고민

* '진보' 학계의 자기 성찰 필요

- 과거 '진보' 역사학계는 임정법통론 비판 : 사실 인식의 측면(임정 역할의 한계)과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측면(반공적·반통일적 체제정당화 논리)
- 건국절 논쟁에서 '진보' 역사학계는 침묵 속에 방관하거나 19년설에 동조
- 왜 우리는 19년설 뒤에 숨었는가? → 역사전쟁이 강화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혔고, '진보' 진영이 임정법통론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 곤혹스럽고 비겁했다.

★ 발표

- 임정법통론의 역사적 경과 : 임정이 현실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실제적 기능, 임정에 대한 사후적 기억의 차원
- 임정법통론의 논리, 의미, 한계 → 강화된 이유와 현재적 합의 성찰

<목차>

1. 문제 제기
2. 식민지-정부수립 시기의 임정법통론
3. '민주화' 와 그 이후의 임정법통론
4. 임정법통론의 논리와 한계
5. 민족주의의 굴절, '대한민국 민족주의'

2. 식민지-정부수립 시기의 임정법통론 : 현실 논리 → 당파적 이데올로기

1) 식민지기 민족해방운동에서 임정의 자기 정당화 논리

- ★ 임정 수립의 의의 : 독립의지 結晶化, 민해운 결집, 민주공화제 천명
→ but 끝이여 한계!

- ★ 1920-30년대 민해운 통일·연합 운동에서 임정 해체 반대논리로 기능

- 국민대표회의(1923) : 임정 '법통(론)' 처음 등장(윤대원) → “法統을 定하여야 할 絶對 必要가 무엇이뇨. 今에 法統을 定하지 아니하면 獨立宣言後 四年間의 法統이 僞政府로 歸할까 念慮인가. 또 獨立의 成不成이 今次 法統의 定否에 係在하였는가.” (독립신문 1922.12.23 「국민대표회의의 목표」)
- 민족혁명당 결성(1935)
- 관내 민족통일회의(1939)

2) 해방후 독립국가 건설운동에서 우익진영의 정치 논리

- * 임정의 법통정부론 : (임정식) 민족주의 + 패권주의
 - 해방직후 임정내 좌파의 기록권 포기애 맞서 헌체제 입국과 임정주도 정부수립
 - 입국 이후 일관되게 임정 중심의 정부수립 노선 견지
 - * 우익의 임정봉대론 : 인공에 대항하는 반공주의(이승만·한민당) or 우익 중심의 좌우 연대(인재흥)
 - * 좌익의 임정법통 부정 : 박헌영(소위 임정법통), 어운형(하나의 독립운동단체)
- 우익진영의 정치 논리, 그조차 통일적이지 않았고 한독당 계열의 주장으로 왜소화

3)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 정체성 논란

- * 대한민국의 임정법통 계승론 : 이승만 주도의 한성정부 법통론과 '19년 건국, 48년 재건' 주장(도진순)
 - * 김구의 임정법통 계승론 부인 : 5·10선거 보이콧, 정부수립 이후에도 부정, 유엔 총회에 임정 승인 요청
 - "현재의 국회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
(1948.6)
- 제헌헌법을 근거로 19년 건국설과 임정법통 계승을 주장하는 것은 재고를 요하며, 이조차 김구가 아닌 이승만의 논리였음

3. '민주화' 와 그 이후의 임정법통론 : 기억 회로 → 민족주의의 굴절

1) 독재정권 하에서 집복

* 80년 이전에는 임정법통론 강조되지 않음

- 이승만 정권은 말로만 임정 계승 주장, 50년대 중반부터 반공주의 강화
- 5·16 이후 헌법 전문에서 삭제 → 다른 방식의 '민족주의' 동원

* 80년대 전반기 관제적·보수적 영역에서 재등장 → 정권의 정통성 강화 논리

- 전두환 정부 : 임정수립일 기념에 관심·개입(조형열)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 헌정부 활동 및 임정수립일 기념주도 → 1985년 "임정법통 계승을 국가기본법에 명문화" 요구
- 이헌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1982) : '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제1공화국' → 제5공화국 헌법정신으로 계승

2) 개헌 국면에서 임정법통(계승)론의 공론화·제도화

* 1차 개헌 논의(6월항쟁 이전)

- 86.6 신민당(이민우) : 유신독재에 억압받던 학생·지식인과 산업화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들의 '정부 부인' 이 '국가 부인' 으로 확대될 가능성 우려, 헌법 개정시 필요한 5대 핵심사항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상해임시정부로 잡을 것" 주장 **대 독재정권 반민족성 비판, 보수야당의 수동혁명?**
- 86.8 경향신문 「허약 보수주의에 보약을」 : '정권의 정통성' 위해 '역사적 연속성=임정법통계승' 주장, 이를 통해 '한국적 보수주의의 탈바꿈' 제안
- 87.2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에 관한 학술대회」 김준열 : 임정의 역사적 의의 역설, 5·16 헌법 전문에서 임정 삭제 비판 → 임정=제1공화국 명시 주장
- 87.3 이종찬 개헌 과정에서 임정법통 명시 주장 → 민정당 수용

★ 2차 개헌 논의(6월항쟁 이후)

- 87.7 헌법전문에 임정법통 계승 반영 합의 : 강성 아당(통민)의 적극적 주장(“법통” 워딩)과 여당(민정)의 호응 → 여야의 손쉬운 합의(김준엽의 역할)
- 제헌 헌법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 .
- 5공 헌법 : ~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 민정당 : ~ 8·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섰은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 통민당 : ~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 87년 헌법 :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87.8 윤치영·안호상·이철승 등 헌법전문 국수주의적 개정 요구 → 단군 홍익인간의 개국정신, 공화제 시대를 연 임정 법통계승, 반탁운동의 민족자주 주체정신, 6·25동란에서 발현된 자유수호정신 등 단지 해프닝?
- 87.9 “헌법 개정안 확정 → 임시정부가념사업회 김영삼·김대중 감사패 수여”

★ 임정법통(계승)론 헌법전문 반영의 배경과 의미

- 배경 : 80년대 진보이념(민중사학) 등장에 대한 보수 세력의 적극적 대응
- 정부 : 대한민국 정통성 교육 강화 → 당시까지 교과서에 임정법통 언급 없었음(김정인)
- 학계 : 이현희(1987) 「책머리에- 민중사관의 의미」 : 민중은 ~ 비판만을 위한 비난계층이 아니고 ~ 건전한 중산층으로 성장해 왔던 신분층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왔고 역사의 주체로서의 정통성의 창조자들 ~ 건전한 민중사관의 정립이 민족사적 법통성 맥락에 있어서 핵심 → ‘민중’의 보수적 전유
- 과정 : ‘국가 정통성’을 매개로 여야 합의 → 헌록 논의에서 86년에는 ‘정권의 정통성’, 87년에는 ‘국가의 정통성=법통’ 차원 → 민주화 국면에서 국가정통성=법통론 강화

→ 임정법통 계승의 법제화는 ‘87년 체제’의 산물이자 그 한계를 상징

3) 민주화 이후 임정법통론의 강화

* 정권 차원의 임정법통 계승 주장

- 노태우 : 임정수립 기념일(4.13) 제정
- 김영삼 : 임정요인 유해 봉환, "문민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김대중 : 첫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

* 학계의 임정 인식 변화

- 임정법통론 확대 : 임정의 존립가치와 역할가치 구분하면서 정통성 강조(독립운동사 연구)
- 통일전선·민주공화제 차원에서 임정의 위상·역할 중시(진보적 한국사학계)
- 제헌헌법의 진보성에 주목, 임정헌법·건국강령과 연속성 강조(법학·정치학)

* '역사전쟁' 과정에서 임정법통론 신성화

- 임정법통론 강화 : 임시정부 시기와 정식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김희곤)
- 임정법통 계승 명시한 헌법의 정전화 : 건국절 반대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헌법정신 위배"
- 정치적·대중적 층위에서 전면적 확산

- 보수세력의 체제정당화 논리를 넘어 '민주세력'의 민족/국가정체성 주장으로
- 과거와 같은 계급적 관점(민중사관)의 임정 비판이나 민족적 관점(분단인식)의 법통론 비판 부재
- '대한민국/건국'의 정당성을 전제하고, 그 시점을 둘러싼 논쟁 & 대한민국의 정체성 해석상 이견(민족·민주화 vs 반공·산업화)으로 왜소화

4. 임정법통론의 논리와 한계

1) 임정법통론의 논리

- * 3·1운동으로 표출된 전 민족적인 독립주권 열망에 기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족주권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족대표기관=법통정부(이용기)
- * 임정이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정부이자 유구한 민족주권을 계승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논리 → 주권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 주장

2) 임정법통론의 한계(1) - 주권적 정당성 측면

- * 임정은 수립 초기 상당 정도 민족적 대표성과 독립주권의 상징성을 가졌지만,
 - 국가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음 : 독립주권 의지의 천명을 넘어서 국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와 실천에서 제한적
 -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대표성에도 한계 : 전체 민해운 세력을 아우르는 독립운동의 최고지도기관 역할 못함
 - 비록 '정부' 형태를 형식적으로라도 존속하고 헌법이나 건국강령 등 국가건설의 기초 작업을 상대적으로 선도했더라도
- 임정법통론은 민해운 과정에서 임정의 존속·주도를 주장하는 패권 논리로

* 임정의 역사적 실재에 대한 과도한 해석 범람

- 실질적 국가 기능 수행(이헌회)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 규모와 내실이 가득찬 민주적 운영 ~ 명명정부가 아닌 ‘정통대한민국정부’ ~ 국내외를 통할 통치하는 한편 내정, 교통, 외교, 군사, 교육, 문화, 재정, 사법 등을 균형있고 폭넓게 운영 발전시키면서 전후 27년 동안을 유지해 왔던 ~ 위대한 민주정부 ~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민족이 ~ 이를 지원 옹호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1945년까지 계속”
- 초기엔 통치권 행사 이후엔 제한적이지만 중심축(김희곤) : “임시정부는 시기에 따라 왕성하게 독립운동계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기도 하였지만, 그 반대로 매우 허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독립운동 조직보다 훨씬 미약했던 시기도 있었다. ~ 이런 난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무려 28년 반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독립운동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

3) 임정법통론의 한계(2) - 역사적 정통성 측면

* 양계초의 「論正統」 (도면회)

- ‘統’이란 하늘 아래 하루라도 군주가 없을 수 없으며, 그 군주는 하늘이 세워민이 받들어 모시는 대상이라는 의미
- ‘正’이란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듯이 민에게도 왕이 둘일 수 없으니, 하나가 진정한 왕이면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의미

☞ 「正 = 유일성·배타성, 統 = 계속성·계승성」의 논리

① 유일-배타적 정통성 논리

★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배타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체제경쟁 논리

- 이현희(1987)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 대한민국의 법통적 정통국가의 맥을 이었다. ~ 북한공산집단과의 현격한 정통사로서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민족정기가 바로 성립·유지될 수 있다. ~ ~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적으로 그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며 옹호하는 것이 민족의 법통성(정통성)으로 맥맥히 계승·유지 ~ ~ 북한공산집단의 법통성은 ~ 민족사적 법통성과는 거리가 먼 억지와 날조”
- 한시준(2017) : 1948년 건국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면, 민족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괴뢰’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체제대결 논리를 우려하여 ‘상대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 김희곤(2006) : “항일투쟁의 길을 걸은 모든 인물과 조직은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존재 ~ ~ 임시정부가 끝까지 정통성을 독점할 수는 없고, 임시정부만이 정통성이나 법통성을 가진다는 말은 편협한 주장 ~ ~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 배타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면, 결국 통일 이후 어느 한쪽에만 정통성을 두는 논리
- ▷ 이러한 논리는 전체 민해운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님 → 논문 제목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 정통성 자체에서 벗어나는 상상 필요

★ 유일-배타적 정통론의 문제점

- 전체 독립운동의 역사상을 왜곡·축소
- 남북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냉전적 논리 강화

② 일원적 '國統' 계승의 논리

★ '역사적 단절'에 대한 강박

- 이헌희(1982) : “100여년 간의 失國의 공백기를 청산 ~ 日帝強占 36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공제하여 「日帝強占 10년이었다는 점을 인식」 → “자부심”
- 이헌희(1987) : “무정부상태 9년 동안 한민족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 - 법통성 회복에 최대의 투쟁목표 - 대한제국의 법통성을 다시 회복 ~ 단절되었던 정통성이 연결”
▷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 계승성, but 법통성 회복을 위해 투쟁=독립운동?
- 김희곤(2006) : 정부 없는 시기 9년을 지나 정통성 가진 정부(임정) 수립, 정부 없던 시기조차 ‘정부조직 단절 시기’로 파악해서는 안 됨(주권이 분산적으로 행사)
▷ 정부 없는 시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해외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주권 행사’라는 무리한 논리 전개

★ '국가'를 통한 민족사 계승

- 한시준(2017) :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면, 1910년부터 1947년까지의 역사를 공백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시기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단절시키는 결과 ~ ~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의 한국민족은 일본이란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의 한국인 동원과 박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
▷ ‘국가 부재 = 역사 단절 = 식민지 정당화’라는 연쇄적 논리비약
- 건국절 논쟁에서 ‘민주세력’도 주장(2008) : “1948년을 건국절로 할 경우 일제에 의한 침략과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 등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은 반민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가가 아니라 60년 된 신생국가로 전락시키는 것”
▷ 48년 건국-60살 신생국가? 그러면 19년 건국-89살 신생국가? → ‘국가’를 통한 민족사의 유구성 추구

★ 국통 계승론의 문제점

- '식민지' 라는 고통스럽지만 엄연한 실재에 눈을 감는다 → 식민지 인식의 왜곡 또는 회피 → '밝은' 역사상 추구 → 식민지 콤플렉스의 반영
- 민중의 복잡다단한 실제 삶과 유리된, 초월적 '국가' 의 계보에 집착 → 국가 중심의 역사인식(국가주의)
- 국가 부재 = 역사 단절 = 식민지 정당화? → 입정수립=건국이라면, 입정에서 이 탈하거나 해산을 주장한 독립운동가들과 일제의 국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한 반도의 2천만 동포들은 비국민인가?(도진순)

5. 민족주의의 굴절, '대한민국 민족주의'

1) 굴절의 계기

- *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진보 이념의 퇴조 → (신)자유주의 강화
 - *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과 '선진국' 환상
 - * 남북 체제경쟁의 사실상 종식 → 반공이데올로기 약화, but 혐오적·멸시적 반복 정서 강화
 - * '민주화' 의 효과 :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시 성취라는 자신감 또는 주술
 - *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 월드컵 민족주의("대~한민국!")
- ⇒ '대한민국' 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결손국가' (빈곤, 독재, 분단/종속)에서 '정상국가' (풍요, 민주, 민족)로
 - 대한민국이 성찰(+지양)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 cf) 2007년 <국가에 대한 맹세> 폐지 아닌 수정

2) '대한민국 민족주의' 시대의 도래?

★ 정상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리로서 임정법통론의 신성화

- 풍요롭고(산업화), 자유롭고(민주화), 굶리지 않고(민족적), 그래서/그럴수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그들만의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가 "이게 나라냐?"로 터져 나왔다면, "이제 나라다!"는 자부심이 그 '나라'를 신성화하는 효과
- 보수세력의 정당화 논리였던 임정법통론이 '민주'와 만나면서 negative에서 positive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임정법통론

★ 민중/통일 민족주의에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 '민중'에서 '국민'으로 달론, 관점, 정체성 이동
- 남북의 지향으로서 민족(국가) 완성에서 대한민국의 확장으로서 민족(국가) 완성으로
-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을 상상하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익의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대립될 수 있음
- but 그 민족과 통일은, 정상화되고 신성화된 대한민국의 확장으로 상상된다. → 김희곤(2015) :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의 대한민국이 될 것"

⇒ 대한민국 민족주의!

★ 무엇을 할 것인가?

- 민족/통일 민족주의로 회귀? → 시대착오!

- 국가주의 vs 민족주의 구도에서 벗어나 내셔널리즘 성찰과 극복

→ 분단 상황에서 양자는 구별될 수 있지만 모두 nationalism, 더구나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공모할 수 있음

→ 근대 국민국가와 그 정당화 기제인 '국사' (National History)에 대한 성찰

→ 입정법통론 벗어나기 : "역사교육은 어떤 종류의 '국가 정통성'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건국 기념에 매달리는 역사 인식은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병폐다. 1919년 건국론 주장은 뉴라이트의 국가주의 역사관의 합정에 빠진 꼴이다. ... 심지어 독재가 아니고 '선한' 정치권력이라도 역사 오용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동기)

<참고문헌>

김장현, 2016, 『역사 전쟁, 국가를 하악하는 세력』, 역사상

김희곤, 2004, 『대한민국일시정주 연구』, 자작년집사

김희곤, 2015, 『일시정주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 자작년집사

아보기, 2018, 『한국사 공부』, 창비

이원희, 1992, 『대한민국일시정주』, 창비

이원희, 1997, 『3·1절의 의미와 일시정주의 전통』, 창비

김장현, 2016, 『3·1절과 일시정주 전통의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훈과 역사』 99

김희곤, 2008, 『대한민국일시정주와 대한민국의 전통성』, 『한국사학사학』 13

도원희, 2009, 『국사는 어떤데 구성되어있는가』, 도원희·공혁출판, 2009, 『역사의 세계』, 추모연구소

도원희, 2015, 『역사와 기억-건국연도와 연도 그 정치의 힘』, 『역사연구』 128

공대현, 2009, 『일시정주전통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연구』 110

공대현, 2015, 『대한민국일시정주 수립과 기념식 다시 보기』, 『역사연구』 122

이원희, 2017, 『관공서 논 3·1절과 일시정주 전통』, 『남한문화』 24-1

이원희, 2009, 『한국 기념 논: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입문』, 『한민과 인식』 겨울

김희철, 2016, 『국사교과서 국문해 논, 그 이후』, 『역사교육연구』 28

관영희, 2017, 『국사교과 '강제' 관공서학계의 '좋은 역사관'이라는 자기규정』, 『역사교육연구』 30

관영희, 2018, 『대한민국일시정주 수립 기념식의 제정과 전통』, 『내일을 여는 역사』 73

관사준, 2008, 『대한민국 건국100년』, 그 역사적 의미와 유산, 『한국근현대사연구』 46

관사준, 2017, 『1948년 건국론 의 의미와 관련 양상』, 『사학』 84

홍정환, 2016, 『전통과 건국』, 그 양면 관하여 대하여(『역사교육연구』 34권2호와 『국사연구』 34권2호)

황미진·김장현, 2017, 『대한민국 건국 100년』, 그 무엇을 지시하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97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국가 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건국절 논쟁의 역사적 함의>>

이기훈(연세대학교)

머리말

1. 건국절 논쟁의 시작과 전개
2. '건국절'의 논리와 함의
 - 1) 역사 - 정치적 투쟁의 장
 - 2) '건국'이라는 사건 만들기
 - 3) 애국주의 이상 만들기
3. 건국절 논의에 대한 반론과 그 함의

맺음말

머리말

‘건국절’ 논쟁은 엄밀히 따지자면 학문적 논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논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들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논쟁은 기념일에 대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또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과 다른, 사회적 기억의 문제이며 현실 정치의 쟁점이 된다.

건국절론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보고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국절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최근 십여 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된 21세기 한국 역사 전쟁의 주요한 전장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건국절 논의의 전개를 학문 내외의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하면서 그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국절 논쟁의 시작과 전개

1995년 □조선일보□가 65회에 걸쳐 '거대한 생애 이승만'이라는 연재의 마지막 회에서 건국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 건국절 논의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보수 우익의 결집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였다. 2003년 북핵저지시민연대,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자유시민연대 등은 ‘건국 55주년 반핵 반김 8·15 국민대회’를 열고 ‘건국절’ 행사를 개최했다.¹⁾

2004년부터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과서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승만 재평가론을 제기하고 ‘건국’을 기념하자는 주장들이 이때부터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기자나 일부 교수, 연구원들이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를 국회에서 언급해 기사가치를 높이고, 다시 언론이 이 논리를 가져와서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먼저 2004년 4월 [월간 조선]에 [경고! 귀하의 자녀들은 위험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 - 고교 국사교과서의 [대한민국은 때리고 김일성 부자 감싸기]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반미·친북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그해 가을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근현대사 교과서, 특히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집중 공격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예를 들어 9월 24일 [동아일보]의 한 칼럼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달성한 압축성장의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긍정적 치적의 축적이 가져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과 과를 구분해 공은 계승 발전시키고 과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²⁾ 언론과 정치권이 이슈를 주고 받으며 역사를 이념전쟁의 장으로 끌어들었다.

2006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에 이영훈 교수(당시 교과서포럼 공동대표)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여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해이며, 이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논리였다.³⁾

이후 2007년 11월 교과서포럼 등이 민간단체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8년 4월 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모체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설치했다. 이 사업단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 신주백, 「정부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건국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사연구』 48, 2009

2) 박범진, 「과거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동아일보』 2004. 9. 24

3) 이영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 7. 31

2008년 7월 3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여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논의를 국회로 끌고 왔다.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인 동시에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접목한 독립된 입헌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임에도 광복절 기념에만 국한돼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되고 있으니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건국절이라고 명칭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계에 학계, 광복회 등 독립운동유공자단체에서 일제히 반발했다. 강창일 의원은 8.15는 광복절이며 민족해방 기념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옹호세력은 자숙하라라는 성명서를 냈고, 광복회는 2008년 7월 28일 광복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광복절 기념식으로 치러지지 않으면 정부의 81.5 기념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8월 12일 역사학계 14개 단체 건국절 철회를 촉구하는 역사학계 성명서 발표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의 백지화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행사의 명칭을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중앙경축식'으로 정정했다. 광복회는 '건국 60주년'도 거부했으나, 63주년 경축식에는 참여했다. 반면에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며 경축식 참여를 거부했다. 야당 대표들이 백범김구 묘역에서 따로 광복절 행사를 가졌고, 독립유공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탑골 공원에서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광복절 유지를 천명했으나, 광복절 식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하고 현대사 박물관 추진을 다시 밝혔다.⁴⁾

이후 건국절 논란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듯 했으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다시 제기되었다. 박근혜의 역사인식은 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지만,⁵⁾ 박근혜 정부 수립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재발의했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⁶⁾

4) 신주백, 2009, 앞의 논문

이완범, 2009, 「건국 기점 논쟁 : 1919년설과 1948년 설의 양립」, 『현상과 인식』 33(4)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5(2), 2012. 10

5)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비대위원장이 5.16 쿠데타를 “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향신문』 2012. 7. 17

6) 『매일경제』 2016. 8. 16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국68주년” --여야 ‘건국일’ 논쟁」

2. '건국절'의 논리와 함의

1) 역사 - 정치적 투쟁의 장

건국절 논쟁을 주도한 뉴라이트 계열은 역사 역사인식을 직접적인 정치적 투쟁의 문제로 보았다. 학계와 언론, 정치권이 호흡을 맞춰 이슈를 만들고 확대하며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이끌면서, 역사는 권력 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이제 전선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증오하는 사람들의 일대 회전”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신지호의 주장은 이런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⁷⁾

보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이런 접근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건국절 논란을 비롯한 역사 이념 공세는 보수 세력이 결집하여 권력을 다시 장악한 이후 스스로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성된 것이었다.⁸⁾ 특히 2008년의 역사교과서 수정과 건국절 추진은 이해 4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충격과 무관하지 않았다. 편향된 역사교육이 수많은 중고생들이 촛불을 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이었다.

‘건국절’론의 기본 전제는 한국인들, 특히 청소년들이 애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아가 교육정책을 맡은 정부 당국이 국민의 의무를 소중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나 정부 당국이나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리 큰 애국심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2008년 광복절 기념식이니, “한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두고 정치와 사회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대립하는 예”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⁹⁾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국절론자들은 국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키우는 자랑스런 역사관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사는 “문명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내외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유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역사이며, 정부 형태와 개발 전략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진경제와 민족주의를 성취한 역사”라는 것이다.¹⁰⁾ 1948년 8월 15일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 역사적 성취이자 출발점으로서 다시 기억되어야 하는 ‘건국절’로서 기억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7) 신지호, 앞의 글, 『동아일보』 2004. 9. 15

8) 하상복, 위의 글, 124~125쪽

9)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2013, 기파랑, 16~27쪽 대한민국 역사를 자부심에 가득찬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애국심이 없다는 논리다.

10) 이영훈, 위의 책, 138쪽

건국절이라는 기념일은 애국심이 샘솟는 역사의 상징과 같다.

역사를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학의 근거를 파괴하는 논리다. 이는 개별적 실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역사 인식은 정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적 쟁점의 제기와 해결 방식은 학문적 교육적 공론장에서 제기되고 해결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권력투쟁으로 이끌게 되면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건국절’의 논리는 이영훈의 이런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대로 제시한다. “건국은 적화혁명 노선에 대항하여 이룩한 자유민주 투쟁의 산물(자유혁명)”이며, “식민지 시대의 종언, 조국 근대화 산업화 혁명의 초석”이며, 이 건국을 주도한 것이 “문명개화파의 후예, 항일 독립 운동의 태극기 세력, 열린 민족주의 세력”이라는 논리다.¹¹⁾

‘건국절’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건국’을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를 단절시켜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승만과 대립했던 김구를 ‘건국’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리적 장치다. 그리고 건국을 1948년 8월 15일까지 완결된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국’은 애국주의 세력의 독점적인 업적이 되고(자유혁명), 이를 토대로 하여 근대화 산업화 혁명이 전개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성해야 한다. 분단과 독재의 이미지로 채워진 이승만은 ‘국부’로 부적절하다. 자유 수호의 선각자이자 해안을 가진 ‘건국대통령’, ‘국부’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재와 실정은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공(功)’과 ‘과(過)’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독특한 영웅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2) ‘건국’이라는 사건 만들기

이영훈은 미국의 ‘건국기념일’ 축제와 같이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7월 4일은 Independence Day이니 독립기념일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리고 건국절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 제성호,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과 추진 방안」, 『법학논문집』 39-1, 2015, 202쪽

건국으로 볼 수 없다면 7월 4일은 더욱 ‘건국’과는 거리가 있다. 1776년 7월 4일은 대륙회의가 대영제국에서 탈퇴하는 것을 선언한 날이며 영국과 전투가 시작한 것은 1775년 4월, 미국이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한 것은 1778년 2월이고,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1783년 9월 3일이다.

프랑스의 혁명기념일도 삼부회 개최(5월 5일), 테니스코트의 선서(6월 20일), 바스티유 감옥 함락(7월 14일), 8월 4일(봉건적 특권 포기 선언), 제1공화정 수립(1792년 9월 20), 루이 16세 처형(1793년 1월 21일), 테르미도르 쿠데타(1794년 테르미도르 9일) 등 수많은 날들 가운데, 7월 14일을 선택한 것이다.¹²⁾

기념일은 제정하는 쪽의 의지가 반영되는 날이다. 당연히 선언이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경우에도 완결된 국가 성립, 이른바 ‘주권국가’의 완결을 기념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을 기념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내전의 승전기념일에 가깝다.

앞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실제 역사적 과정의 완결성과는 무관하다. 기념일을 정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자 했는지, 또 후대에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려고 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유지하거나 혹은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국론자들이 국제법적 승인 등 요건을 내세우며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것은,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여 김구와 김규식 등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이승만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의 주역들이 북한과 남한 내의 건국 반대 세력의 영향을 물리치고 이룩해낸 의지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¹³⁾”라고 설명한다. 건국은 정치적 판단과 투쟁이 집약된 사건이 되는 것이다. 건국은 “자유대한인들이 대한민국이란 국호 아래 근대적 의미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권을 대내외에 발현하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이며,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국민, 영토, 정부, 국제관계 창설 능력, 즉 국제법상 국가의 4가지 성립요건”을 갖추고 “국제 사회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아 국제법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국론자들도 영어로 건국은 모두 ‘Nation Building’으로 표현하며, 국제법학자들도 국가의 성립 혹은 국가의 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¹⁴⁾ 일반적으로 ‘Nation Building’은 단기간에 끝나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12) 하상복,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5(2), 2012. 10

13) 김영호,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의 특징과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1호, 2008, 6쪽

14) 김영호, 위의 논문

장기간에 지속되는 국민 혹은 국가 형성을 의미한다. 사건이 아닌 것이다. 이렇다보니 건국은 Nation Building이지만 건국절은 ‘Nation Foundation Day’로 표기하고 있다.¹⁵⁾ ‘Nation Building’을 단기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정치적 사건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특히 김구와 이승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므로 1948년의 시점만 강조되고 정부 수립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

후대에 자신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렇게 단절적인 행위로 묘사하게 될 것은, 아마 이승만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건국절론자들은 당시 헌법 전문의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구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 ‘독립기념일’이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광복절’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연호에 관한 법률(1948. 9. 25)’이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 10. 1)’을 보면 ‘건국’을 특정하지 않고 4대 국경일(개천절-삼일절-광복절-제헌절)을 통해 국사 전통을 창안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¹⁷⁾

건국절론은 역사학계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승만을 포함한 신생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분단이 실제로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합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온전한 정부가 아니라고 인식했으므로 국회에 100석의 여석을 두고 영토 및 통일 지향의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제헌의회 구성원들은 통일을 완결된 건국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통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Nation Building’은 안보 문제의 해결, 정치적 제도의 보완, 주체로서 국민의식의 형성, 사회경제적 질서의 재정비 등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건국’즉 ‘나라 만들기’를 1948년 8월 15일에 집중되는 정치적 결단이나 사건으로 서술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영웅 서사 만들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3) 애국주의 우상 만들기

건국절론은 ‘Nation Building’보다는 ‘Nation Foundation’과 ‘Founding

제성호, 「건국절 제정의 타당성과 추진 방안」, 『법학논문집』 39-1, 2015

15) 제성호, 위의 논문. 경우에 따라서는 National Day of Republic of Korea로 번역하기도 한다. 유영옥, 「건국절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한국보훈논총』, 10권 4호, 2011

16)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백년동안, 2016

17) 지수걸, 「역사논쟁은 '배틀(battle)'이 아니다-건국절 논쟁의 주요 쟁점과 교육적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32, 2016.

Father'를 염두에 두고 제기된 것이다. 우리도 국부, 건국 대통령을 만들자는 것인데, 미국의 Founding Fathers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여자들을 일컫는 복수의 호칭이다. 그러나 한국의 건국절론은 이승만이라는 단일 국부를 상징하고 건국은 그 영웅적 행위의 결과로 해석한다.

“당시 이승만은 남한 우익 진영의 지도자 가운데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의도와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정치적 변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승만의 권위주의 체제는 반공주의, 북진통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대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했으며, “그 밑바닥에는 자유민주주의적 민족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18)

이승만이 애국의 상징이며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된 반면, 김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비애국적 인물이 된다. 이영훈은 김구의 암살을 서술하면서도 안두희가 주장한 내용 즉, “김구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하고 미국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살해했다”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승만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공’과 ‘과’를 같은 비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논의도 그렇다. 19) 그리고 공과 과를 분리할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의 대답에서 김일영은 이승만이 “독재도 하고 부정부패도 했죠.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잣대”가 많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 독재를 했나 민주를 했나, 또는 통일이라는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쉽게 다음과 같은 박지향의 논리로 이어진다.

“이박사가 마키아벨리적인 뛰어난 감각을 지닌 정치인이었고, 나름대로 1950년대에 그런 정치인이 있었기에 한국이 그나마 발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김구 같은 분에게 맡겼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20)

이 관점은 김영호의 논문에 근거한 것이다. 김영호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군주의 역량을 ‘비르투(virtue)’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이승만이 건국과정에서 이러한 ‘비르투’를 발휘

18) 이영훈, 2013, 앞의 책, 236쪽

19) 「'자학사관' 이제 그만 ... 국사 교과서 6종 중 4종, 이승만의 독립운동 무시」, 『중앙일보』 2011. 4. 11

20)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 「제 9부 대담」,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4, 663쪽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1)

여기에 대해서 푸코가 마키아벨리를 평가한 것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푸코는 마키아벨리가 “구출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군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상과 군주의 관계”였다고 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구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영토 인구와 자신이 맺는 권력관계”였던 것이며, “마키아벨리에게는 (근대적 의미의) 통치술이 없다.”²²⁾ 근대 국가의 이념과 통치술은, 마키아벨리적인 술수가 아니라 인구에 대한 인식과 통계, 근대적 학문에 기반해서 등장한다. 근대적인 공화국을 비로소 건국했다는 영웅은, 전근대적 모략의 천재였던 것이다.

3. 건국절 논의에 대한 반론과 그 함의

건국절 논의에 대한 반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었다. 한시준은 건국절 논의가 제헌헌법 및 현행 헌법의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계승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승만의 본인의 생각과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 업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²³⁾

신주백이 건국절론이 1945~48년을 해방으로 보지 않고 식민의 연속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국절이 광복을 완전히 부정하는 논리라고 지적하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임시정부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²⁴⁾

법학계에서도 임시정부 법통론으로 대응했다. 한인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운동의 결과이며 임시정부가 공화제의 내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통해 한국인의 대표성을 유지, 강화했으며 이것이 해방 이후 제헌 헌법의 정신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으며, 특히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평가했다.²⁵⁾ 자연스럽게 임시정부의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을 막기 위한 헌신의 표상으로서 김구가 이승만의 역사적 대항인물로 구현되

21) 김영호,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의 특징과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집 1호, 2008, 12~13쪽

22) 미셸 푸코 지음, 오르트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337쪽

23) 한시준, 『역사농단 1948년 건국론과 건국절』, 역사공간, 2017

24) 신주백, 2009, 앞의 논문

25) 한인섭, 「3.1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혁명」, 『한국일보』 2019. 1. 2

었다.²⁶⁾

이완범은 건국절 논쟁의 대결 구도를 □광복 : 김구-임정파와 그 후계자 중시□ vs □건국 : 이승만-한민당파와 그 후계자□으로 구분하며 논쟁을 감정적 과별적이라고 평가했다. 건국론자에게는 광복 없는 건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광복론자에게는 건국=친일파라는 폄하를 거두고 건국의 역사적 과제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²⁷⁾ 논쟁이 감정적이라는 지적은 옳지만, 이완범의 충고는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정치적 투쟁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결에, 학술적 논의의 규칙을 지키자는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국절 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 여기에 임시정부 법통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정 수립은 운동사·정치사·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3·1운동에는 훨씬 더 다기한 양상이 존재하고, 이 양상들이 임정수립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역사서술에서 하나의 '정통'을 설정하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정통만으로 강제 귀속시키거나 배제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강제 귀속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임시정부'는 실체이기도 하지만, 독립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임정은 20세기 초반 일부의 제국들이 몰락한 공백지에서 세계를 재분할해야 하는 모순적이고 혼란한 국제 정치 구조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여러 방식의 국가 구성 원리들이 부딪치는 격변과 불안정의 시기에 나타난 현실적 대안이 바로 임정이라는 형태였다. 당연히 세계정치 구도의 개편은 임시정부의 전략적 가치를 약화시킨다. 유동적인 정치 상황 하에서는 임정이나 대안적 국가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안정된 세계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정통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임시정부의 전략적 의미가 증발할 우려마저 있다.

또 김구 영웅론도 마찬가지다. 김구가 1948년의 시점에서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저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 정국에서 두 사람이 계속 첨예하게 대결했던 것은 아니다. 협력과 경쟁, 대결의 관계가 변화하며 전개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하에서 제기된 단절과 왜곡된 정통론(건국절)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정통론, 법통론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6) 한인섭,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 2014. 10. 26

27) 이완범, 2009, <건국 기점 논쟁 : 1919년설과 1948년 설의 양립>, <<현상과 인식>> 33(4)

맺음말

건국절론은 1948년 8월 15 일을 일종의 단절적인 분기점으로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이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반역사’적이다. 보통의 역사가 ‘총체성’과 ‘영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민족의 기억을 구성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하거니와, 건국절론은 이와 반대로 익숙한 냉전의 기억으로 민족과 다른 ‘국민’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 한다. 문제는 이런 기억 만들기를 일련의 정치적 투쟁의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 건국절론의 담론은 학문적 논의의 장 밖에서 연속적인 정치적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보수세력이 권력을 탈환한 이후에는 이념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건국절론은 역사학계 전반의 반발을 샀다. 성명서와 반론들이 앞다투어 나왔다. 그러나 건국절론이 워낙 반학문적 맥락에서 전개된 탓이기도 하지만, 건국절 비판론도 기존의 정통론을 다시 주장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절과 새로운 정통에 대해 기존의 민족주의 정통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은 우리가 충분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해 왔던 반면, 최근의 국가주의는 승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어느 경우든 역사는 승리와 성공의 진보 서사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건국절론의 폭력성과 반역사성은 앞서 많이 언급했지만, 법통론도 최종적인 진보와 승리의 서사라는 점에서 현실의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특히 3월 1일, 4월 11일, 8월 15일,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국민 승리의 역사 이야기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역사는 단순한 정의의 실현도, 우수한 민족의 승리 이야기도 아니다. 성공이나 진보의 이면에 가혹한 실패의 경험, 모진 고통의 경험이 존재한다. 8월 15일은 식민지의 종말이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출발점이다. 4월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지만 곧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6월 항쟁은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보기 드문 성공 사례지만, 양극화된 현재 한국 사회의 본격적 출발이기도 하다. 과거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새롭게 해석하며 논의를 거듭하는 것, 그것이 역사가 할 일이다.